

< 정보사 수사2단 계엄팀, 입막음 · 입단속으로 증거인멸 등 진실은폐 제보 잇따라 >

- 정보사 수사2단 계엄팀 중령 팀장 8명과 소령 10여명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 계엄팀 소속 인원 중에서 임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
- 부승찬,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정보사 수사2단의 팀장급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담 증거 등 반드시 확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2일 “정보사 계엄팀 체포 조에 가담한 중령 팀장 8명과 소령 10여명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한다”라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비상계엄 종료 후 계엄팀 모집책 3명(중령2명, 소령1명)의 입맞춤 단속으로 증거인멸 등 진실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중령(팀장급) 8명 : AOO, AOO, BOO(선관위 투입 예정 여성 중령), AOO, AOO, AOO(속초HID), COO, DOO

* 소령 10여명 : EOO, FOO, AOO, AOO, AOO, GOO, BOO, COO, DOO, AOO 등

○ 부승찬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중순부터 정보사 계엄팀은 정OO 대령과 김OO 대령을 중심으로 최소 중령 팀장 8명과 팀원 소령 10여명, 대위급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소집 명령으로 판교 정보사 100여단 1층 대회의실에 집합해 대기한 인원이다.

○ 부승찬 의원은 “1층 대회의실에 대기한 인원 중에서 임무(체포조)가 무엇이었는

지 인지하고 있었던 인원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면서 “이들 계엄팀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를 하지않고 활동한 사조직이며, 이는 엄연한 군기문란 행위이자 반란미수행위이기에 정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했다.

○ 조사단은 정OO 대령이 10월 중순부터 정보사 공작요원 등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며 은밀히 진행했고, 계엄 이후에는 정OO 대령 라인인 모집책 육사3인방이 계엄팀 소속 인원에 대해 개인행동 금지 등을 통한 입단속을 이어오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막기위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도 진행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부승찬 의원은 “당일 임무가 적힌 계엄관련 문건이 회의장에 모인 인원들에게 배포됐으며 12월 4일 새벽 AOO 중령이 회수 후 폐기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12.3 당시 노트·메모 등을 포함한 계엄 관련 전자·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정보사·방첩사령부 등 국방부 기관과 대통령실,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와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끝.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 문의 : 부승찬의원실 02-784-9130

더불어
민주당